

목 차

■ 우리나라 경제 현안과 과제

Executive Summary 1

1. 기업 규제 개혁의 실상 2

2. 기업 환경 개선 방안 3

3.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 9

< 토론 > 12

■ HRI 경제 지표 25

우리나라 경제 현안과 과제

□ 기업 규제 개혁의 실상

-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단지 규제를 덜어준다는 ‘소극적 관점’이 아니라, 기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적극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임

□ 기업 환경 개선 방안

- **선진 제도의 도입 방안** : 정부는 對 기업 정책에 있어 기업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법규 위반보다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 기업들의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에 대한 위법성 여부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이 중요함
 - 동의명령제 :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위법성 판단 이전에 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 **행정 분야별 혁신 방안** : 정부는 창업에서 퇴출까지 이른바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함
 - 지방행정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도 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델이 유용할 것임
 - 통관 행정은 기존 세관원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업무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모델에 의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환경 규제의 경우 특정 구역에 특정 업종 전체가 입주할 수 없는 등의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정확한 오염원 파악을 기초로 유연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임
-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 현재 한국은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취약함
 -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현장 실무 교육 중심의 창원폴리텍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들 수 있음

□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임

우리나라 경제 현안과 과제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6년 8월 28일
- 연사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기업 규제 개혁의 실상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님, 또 김종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님 오늘 여기에 와서 뵈니까 만나고 싶었던 많은 분들을 뵈게 되어서 저로써는 영광이기도 하고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부총리 취임 이후 일정을 워낙 빡빡하게 해서 뵈고 싶었던 분들도 많이 못 뵈었는데 오늘 조찬이지만 얼굴을 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료는 준비를 해서 유인물로 다 돌린 걸로 알고 있지만 건너뛰면서 시간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인식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기업 환경 구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의 평가나 국제적인 평가로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4쪽에 보시면 기업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38%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 또 KDI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 인력 부족과 함께 규제가 가장 큰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조사 결과를 봐도 155개국 중에서 27개국으로 랭크가 되어서 홍콩, 싱가포르 같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뒤지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과 고용 분야에서 대단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평가가 되고 있나 하는 걸 여러 모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 위원회나 또는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재경부가 또 산자부와 관련 부처들이 규제 부서들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좋지 않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규제 개혁 위원회 경우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규제를 어떻게 덜어주느냐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 또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러한 제도들의 경우에는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제도들입니다. 규제 개혁 위원회의 경우에는 있던 제도 중에서 기업이 어떻게 불편하게 느끼나 라는 걸 찾아서 덜어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한테 도입이 되지 못한 제도들의 경우에는 기업 환경 개선의 접근 방식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 기업 환경 개선 방안

■ 선진적 제도의 도입 방안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그와 같은 제도적인 틀이 미진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기업을 회사라고 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네 가지 유형의 회사 형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등 네 가지 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네 가지 이외의 다양한 회사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합하는 회사 형태로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 그와 같은 기업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부처간에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 대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금융 관행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에 신용 평가 기법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신용 평가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신용 대출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IMF가 정책 권고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담보가 활용 가능 하도록 등록 등기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어드바이스가 지난 5월에 미션이 와서 제출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담보의 등기 등록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선진국의 여러 제도를 검토해 본 결과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동산과 무채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시장에서 가격을 평가하게 되면 거기에 질권설정을 하고 그 물건을 담보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아마 부동산 이외에 이용되는 케이스를 따진다면 비행기나 자동차 건설장비 이런 정도 외에는 이용되는 게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독금법, 우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그런 분야에 기업이 어떤 위반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그 위법성 판단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위법한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재산형이나 신체형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법성의 판단과 재산형이나 신체형의 부과가 기업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선 위법성 판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당장 신체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디펜스한 입장에서도 대법원까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기업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바로 위법성의 판단보다는 문제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금법이나 증권 거래법 관련 사안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내도록 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 이닉스가 미국의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받은 것도 거기에 위법성 판단보다 얼마나 돈을 내면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라는 쪽으로 가 버리니까 기업 활동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의 명령제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컨센트 오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와 같은 제도가 우리의 경우에는 아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발전에 따라서 아예 우 리가 제도 도입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기업 활동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느냐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종래의 규제 개혁 위 주의 접근과 더불어서 상당히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 니다.

■ 행정의 분야별 혁신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에서부터 퇴출까지의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서 과연 이와 같은 법률이라든지 또는 금융이라든지 조세라든지 또는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 각 영역에 기업 활동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라는 것을 씨줄과 날줄로 칸을 만들어 본다면 상당히 많은 개선의 영역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행정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은 것은 그 동안의 규제 개혁 과정에 서 위임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가 개선된 걸로 카운트가 되어 왔습 니다. 어떤 제도는 없애버린 것도 있고 조항을 넣은 것도 있고 또 지방에 위임한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지방에 위임했을 경우 에 오히려 중앙 정부가 맡아서 해 줄 때 보다 더 불편하고 규제가 많다는 지적 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위임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팔로우업을 해서 실제로 기업 활동에 애러가 제거되는 단계 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자체의 여러 단체장들께서, 특히 시장 도지사의 경우에는 아마 어느 한 분도 저 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도지사나 서울 시장이나 인천시장이나 부산 시장이나 어느 누구도 기업 활동에 애

로가 되는 부분을 덜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저희들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 단계에 내려가면 그와 같은 뜻이 충분히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행정 쪽에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특별 자치도의 여러 가지 의제 처리하는 모델이라든지 또는 경제 자유 구역 창해 경우에도 일부 의제 처리 모델이 있지만 그 외에도 대행 서비스를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는 많은 민간 서비스회사들이 창업이나 공장 설립 부분에서 기업에 수주를 받아서 대신 뛰어주는 모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더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성사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모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법을 고쳐 가지고 지금 제주 특별 자치도나 경제 자유구역에서 해당 되는 것 같은 의제 처리 부분을 각 지방 행정기관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라도 지금 경제 자유 구역청에서 대행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여러 가지 인더스 코리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모델이라든지 또는 경제 자유 구역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 조직 모델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방의 시/도/군에 이르기까지 전부 고쳐준다면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안들이 지방의 행정 현장에서도 그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조세의 경우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는 물론이고 관세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가서 옛날에 15일씩 걸리던 통관 날짜가 지금은 3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선진국 처럼 공해상에 배가 어느 항구로 들어온다라고 되었을 경우 이미 공해상에 떠 있는 선박의 화물 성질과 선박 회사의 특성과 화물을 보내는 상대방의 특성 우리 쪽 화주의 특성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수치화시킨 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우리에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밑수나 그런 분야에서 위험성이 있는 품목들을 컨트롤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관 당국 전문가들의 직관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에 의한 모델에 의해

서 평가한 것들이 도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통관 일자 같은 걸 훨씬 더 대폭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균 4일이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는 15일씩 걸리는 것도 있고 하루만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평균 4일이지만 편차는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편차를 완전히 줄여서 4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로 만든다든지 또는 4일 자체는 1일이나 2일로 단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제도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비슷합니다. 환경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 구역의 경우에는 업종을 정해서 그 모든 업종이 일체가 못 들어가게 되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니겠는가 그 경우에도 환경을 처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발달된 여러 가지 처리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을 처리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원천적으로 모든 분야를 틀어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면서도 환경 문제에 진전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비점 오염원에 대한 주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한건 한건으로 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별장이나 이런 경우 집중해서 모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오염원 말고 여러 가지 비점 오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면서 전 오염원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와 같이 아예 19개 업종은 전부 다 안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부터 시작해서 7쪽에 회사 형태 부분, 또 영업 영역의 여러 가지 측면, 8쪽의 토지와 관련해서 임대형 산업단지 이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가 임대 장기 저가 임대 땅을 공급해 나갔습니다마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기업들도 내국인 차별해소 차원에서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장기 저가 임대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장기 저가 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환경 부분은 말씀 드렸고, 10쪽에 조장행정 분야의 행정분야 조세 관세 분야도 말씀드렸고 11쪽에 토지 분야 공영 분야의 담보 대출 관련된 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 경쟁력 재고 방안

또 인력 분야도 우리가 15세 학생의 평가 결과 OECD가 3년마다 시행하고 있지만 피사 결과를 보면 2000년도에도 우리가 세계 2위, 2003년도에도 우리가 세계 2위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조사가 지난 5월에 시행이 됐고 내후년 쯤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데 사실 성적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비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수많은 선진국보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의 포인트는 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D나 WF, 또는 타임지, 생활 교통 대학등 여러 가지 세계 대학을 평가한 기관들의 결과를 보면 한국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보통 부진한 것이 아니라 IMD 같은 경우에는 60개국 중에서 2004년에 59위 2005년에 52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 타임지나 생활 교통 대학의 경우에도 대단히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의 혁신이 인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애로를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혁신의 분야가 있겠지만 15세 학생들이 그와 같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1인당 투자비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중고 선생님에 대한 보수와 연금 혜택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가고 그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겠느냐 라는 문제, 또 거기에 평가 체제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라는 문제, 또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문제인데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의 경우에는 제가 쓴 게 폴리텍 대학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원에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랑제꼴 시스템이 이와 같은 형태의 대학을 운영하는 셈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인 하우스 팩컬티 50%, 외부 팩컬티 50% 외부 팩컬티는 대부분 기업에서 바로 그 일을 예를 들어 기술이나 설계를 담당하는 분이 직접 대학에 와서 가르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숙제가 대부분 텀페이퍼를 쓰게 되는

데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텀페이퍼를 작성하게 되면 제일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 그룹을 그대로 자기 회사로 데리고 가서 인턴을 시킵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회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일을 바로 다루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바로 종전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델이 우리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창원에 있는 폴리텍 대학의 성과를 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충분히 작동되고 효과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저희가 혁신 도시나 여러 가지 균형발전의 모델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단위로 인력 공급 체계도 해당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델이 작동이 된다면 충분히 지역 단위의 인력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

행정분야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출자 총액 두 가지가 재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환경을 포함하여 신문에서 제가 쥐어 터지고 있는 분야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분야는 그 동안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와 같은 균형 발전에 여러 가지 시책의 진도가 진행이 된다면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 동안의 해당 관련법들을 만들 때 정부가 일관되게 제시했던 논리였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집중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나가자고 하는 것이 참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 규제는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이 충돌하는 분야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단기 정책을 어렵기 때문에 단기 분야에서 자꾸 풀어주게 되면 단기가 다 풀어지는 과정에서 장기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목표는 장기 목표대로 해

나가면서 단기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덜겠느냐 라는 것이 그 동안의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라든지 엘지 전자라든지 LCD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의 개별 케이스를 해결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관련 규제 사항들이 고시나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이 누더기 모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겠느냐. 혁신 도시가 금년 중에 두 개 정도가 출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단위로 대부분 입지 선정과 설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에 두 개정도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나머지 부분이 출범한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에 대한 규제 부분도 꽤 정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도 행정중심 복합 도시도 착공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완화를 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접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가지고 가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규제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데 그 옆에 라인을 같이 깔아야 물 처리도 같이 하고 직원들도 교대제로 같이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지방에 따로 떨어져서 만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수도권에 건설하지 않으면 차라리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지방으로 가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폭넓은 규제 완화는 내년 하반기 정도를 목표로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의 중간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서울 경기도 인천 3개 시/도지사들 뿐 나머지 13개의 시/도지사들이 조직적으로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뭐가 생기면 절대 안된다는 모임이 있어서 그걸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애초에 혁신도시나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또는 기업 도시를 만들 때 법안 통과할 때 그분들이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과도한 반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대기업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과가 있습니다. 과거 경제 발전 과정에도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사항인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 시장 지배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 지배구조에 따른 문제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지배력 부분은 우리가 개방 경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지배력 분야에서 큰 폐해가 발생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지배 구조 분야에서는 아직도 진전이 있었지만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배 구조 부분은 세 가지 예로 책임성, 투명성, 건전성. 건전성은 재무 건전성입니다마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재무 건전성 분야에서는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다만 책임성 부문과 투명성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재판에 걸려 있는 재벌그룹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여러 사례로 볼 때 또 매년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하는 새로운 기업 집단에 포함된 기업의 내용을 볼 때 물론 경영 합리화 때문에 포함된 기업도 있겠지만 전세계대기업들이 오히려 아웃소싱을 더 진전시키는 반면 우리 기업은 오히려 그 동안 아웃소싱 했던 것도 내부화 시키는 경우, 내부화가 되면 분명히 내부 거래 가능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진전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도 기업에 부담을 더는 쪽으로 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TF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당은 당대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재계를 재계대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논의를 앞당겨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TF 논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 과정에서 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송대희 감사원 평가원장) 경제가 어려운 때에 권오규 부총리님과 같이 행정과 이론과 대내문제와 대외 문제 OECD, IMF 등에서 근무를 하셔서 누구보다도 해결사로써 어려운 형국에 책임으로 잘 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부담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스타를 찾는 시대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승엽이 몇 호 홈런을 쳤느냐 미국에는 추신수가 어떻게 구라파에서는 박지성이 어떻게냐 기업의 경우에도 현대 자동차의 마켓쉐어가 어떻게 구라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제품들의 애기가 들려올 때 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를 걸고 이렇게 글로벌 스타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기업의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대학도 500대 안에 드는 대학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도 맞춰져야 하는데 지금 규제나 공정거래를 보면 글로벌 스타의 개념이 없고 어떤 네이션스스테이트 라든지 그런 좁은 시각에서 누가 크냐 누가 앞장 서냐, 누가 시장 지배력이 크냐 이런 좁은 우물 안에서의 잣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실제 시장 돌아가는 것과 국민들의 기대와 규제 정책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번에 어차피 출자 총액 제한 제도나 수도권 문제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기업에 글로벌 스타를 키우느냐, 육성하느냐 또 그렇게 해야 줄줄이 중소기업들도 여러 가지 일거리도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정을 다소 앞당기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공정거래 규제 이런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양적 규제보다는 질적 규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공정하게 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크고 작은 것 보다는 질적인 규제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아무튼 본질적인 발상의 전환 가운데에서 새로운 TF 팀이 하나하나 챙겨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미 FTA에서 오늘아침에도 라디오를 들으니까 미국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저도 착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방이라든지 그런 건 세계 대세인 과정에서 문제는 피해 집단이나 개방에 당장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고 볼 때 협상의 주 대상을 국내의 전통적인 산업집단이 오히려 FTA의 대상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해야지, 물론 미국과 협상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주 대상은 피해 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FTA를 안하고 우리 농업이나 기타 몇몇 업종들이 이 상태로 가면 그대로 버틸 수 있느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우리 농업에 경쟁력이 있느냐를 진지하게 농민들과 얘기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좀 협상의 대상 포인트를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아니냐, 공을 들이는데 피해 집단과의 협상이나 이해 폭을 넓히는 부분에 정성을 못 들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TA 추진 과정에서 모처럼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법안이 있는지 FTA와 관련해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역 균형 개발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분권화를 하면서 지방에 돈이 많이 갔습니다. 전체 재정 지출을 보면 지방에서 쓰는 돈이 더 많을 정도로 지방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지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장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당초에는 의회가 지방 단체장들의 재정 집행에 대한 견제를 해 달라고 했지만 지난 몇 년 지켜보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계속 분권화를 하고 지방 재정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자칫하면 여러 가지 국방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복지에도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지방에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쓰이는 돈이 통제장치 없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지방 재정에 대한 통제 장치라고 할까 투명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빌드업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홍식 한국금융연구원장) 구체적인 코멘트보다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슈페터가 창조적 파괴가 자본시장에서 성장 발전하는 데에 기본 핵심이라고 했는데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우리 사회나 경제를 봤을 때 집단적 파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별하게 서로 생각을 해 보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쪽이 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고 금년 초에 황우석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보다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최근 바다 이야기까지 해서 한쪽으로 비난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그 나름대로 논리와 경제적 논제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저희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의 라자노고 징갈레스 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자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기 라는 책인데 그 책이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폭넓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는 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득권층의 정치적인 힘이 자유 시장 경제 발전에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득권층이라는 건 보통 얘기하는 재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건 노동자층의 노조의 집행부라든지 무엇이든지 경쟁에 노출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기득권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쟁에 계속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쟁에 이긴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계속 정치적 힘으로써 경쟁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의 경제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기업 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협력 협조를 거치면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부총리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나 지표상으로 보면 올해 또 내년에 가면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행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고 BSI나 CSI같은 경우 심리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단기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떨어지는 걸 보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징

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시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경영 환경, 한미 FTA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경영 환경 이건 시장 경제 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것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과연 이런 걸 추진할 때 국민적인 협력이나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총리께서 사석에서 얘기하지만 재정 경제부가 과연 경제 부처 내 조율 통합하는 데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권한을 줬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짜 진전될 수 있느냐에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총리께서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조용히 일을 추진하시고 나대지 않고 실사구시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일을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 부처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얻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분히 우리 경제 사회 내에서 경제 부처 내에서도 협력 조율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현명하고 성숙된 경제 발전이 있지 않나 해서 부총리께서 조율과 협력을 경제부처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 송원장님이 지적하신 양적 질적 규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다른 말로 저는 물리적 규제와 시장 친화적 규제, 그래서 물리적인 건 줄이고 시장 친화적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영역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분석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도 분석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서비스 분야는 상대방을 만나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석에 애로가 있었지만 이제 대충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용역별로 피해 분야 크기 등이 분석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피해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문제와 그 제도적인 틀에 돈을 담아서 투자, 지원하는 부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이나 제조업 수산업분야는 틀과 투자 개혁들이 성립이 되어 있고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각 영역별로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지방 재정 통제 장치는 세수 부분에서 교부금과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교부금 같은 경우는 종래에 산정기준의 패러미터들이 주로 인구수라든지 이런 패러미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다 퍼포먼스 중심의 패러미터로 바꾸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불 쪽에서의 개선 결과에 연동해서 나가게 되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통제 장치가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 원장님 말씀 중 내년이 어렵다. 내년이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4% 대 중반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개혁 조건의 악화가 금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년에 5% 성장을 봅니다 마는 유가상승 등등의 악화 요인 때문에 3.5% 정도가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결국 국내 성장은 1.5%, GNI성장의 1.5% 인데 1.5%면 엄청난 불황입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4.4% 대 중반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교역 조건 악화는 금년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GNI(체감 경기)는 금년 1.5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나은 숫자가 되기 않을까 해서 체감 경기가 낫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거시경제의 틀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경기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한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법적인 권한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사실상의 권한은 줄어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제 부처와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힘을 발휘해서 부처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책의 내용에서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부처를 조율해 나간다면 재정부의 부하된 임무를 다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 우리 기업의 경종을 떠올리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히 대학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쪽에 인식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어충장님은 자리를 뜨셨는데 두 사립 대학교 총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와 닿는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들이 과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교육에 있어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분들은 안 계시지만 옛날에는 사립국민학교를 서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립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이 투자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대학은 이미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는 공교육이 상당한 역할을 해 주는데 대학에서는 그게 안 되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 주요 포션은 사립입니다. 그런데 그 사립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이라는 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어떻게 운영되어 갈 것인가! 등록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 올리는 것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규제되어 왔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도 물가 때문에 규제를 했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의해서 굉장히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 외에 다른 게 또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기부금인데 기부금이 과거에는 재벌 총수들께서 상당히 인심쓸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 총재님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요즘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총수도 하고 그러면 쉽게 되었는데 요새는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 문화도 별로 허락이 되어 있지 않고, 결국 문제는 국가가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 재정의 사립대학 기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 이상 되고 일본도 20%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껏 해야 45% 이것 가지고는 대학의 경쟁력을 국가가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이론 외부 경제성이니 등등 이런 논리를 끄집어낼 필요도 없이 이제 한국의 사립대학을 발전시키려면 국가가 나서야 된다 물론 BK라고 나오고 있는데 BK가 상당한 지원인 건 분명하지만 전부 학생들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고 학교 설비에는 조금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국가가 사립대학을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는 학교 발전이 참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갖고 있으신 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송대희 감사원 평가원장) 오늘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차분하게 앞으로 잘 대응하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모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고 요새 하는 일과 연관된 걸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학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질문이라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구한 것 같습니다. IT, BT라든지 재경원에서 서비스 산업에 역점을 두자는 페이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문화산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인력인데 인력과 관련된 건 교육인데 교육 중에서도 대학이 제일 문제다, 정말 문제를 명확하게 잘 보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 관련된 곳에서 일하다 대학에 7년 가 있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총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많이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대학에 많은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은 분명하지만 대학의 분위기를 보면 뭐든지 똑같이 나누어야 되고 고대 총장님, 연대 총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학을 경쟁 위주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다 경쟁을 바탕으로 하라고 해 놓고 왜 지식인의 집단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비슷한 대학을 옆에 갖다 놓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 같은 경제 자유 구역 세 군데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총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그 귀한 깃벌을 다 메워 가지고 인간으로 말하자면 간과 비슷한 깃벌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대학을 유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국의 대학을 혹은 외국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또 법을 보면 외국 대학과 연구 기관이 오는 것을 마치 투자 유치로 법의 정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총리께서 실무 담당자로서 법을 만드셨고 저도 거기에 조금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비영리 교육 연구 기관을 유치할 때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결국 서비스 산업이 국제 경쟁력인데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바로 언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 일어를 함께 잘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이 나라에 수천명씩 배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외국 대학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외국 대학 두어 정도만 유치해서 서울 대학 연대 고대를 경쟁을 시켜놓으면 그 대학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주력 대학이 변화가 되면 기타 대학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경쟁 위주의 대학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평소에 존경하는 두 분의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같습니다.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공공 부분에서 들어가는 자금과 민간 부분에서 들어가는 자금 두 개의 소스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민간 쪽에서의 기부금 쪽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더 쓰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공공 쪽에서도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체도 돈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 대학을 나왔지만 미네소타 대학의 50년대까지만 해도 주정부 예산의 50%가 미네소타 주립 대학에 들어갔고 현재도 전체 주정부 예산의 55%가 교육에 들어가고 교육에 들어가는 것 중에 3분의 1이 넘는 부분이 미네소타 대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지역주민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부분에도 퍼포먼스 위주로 지출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에 돈을 얼마나 넣느냐 라는 것도 배분 기준에 포함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정부도 대학에 대해서 책임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인데, 이와 같은 국가와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의 재원이 대학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의 평가 체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설비만이 아니고 학생이나 교수진과 커리큘럼과 배출 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능력과 굉장히 많은 분야의 선진국의 평가 체제가 우리

경우에도 도입이 되어야 하고 그 도입된 결과가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모집이나 교수진의 모집이나 펀드메이징에도 평가와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 어떻게 평가 체제를 도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의 경우 대학이 개편 치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 평가 체제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거기도 온갖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2004년에 처음으로 평가 체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보다 짧은 시간 내에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배출시켜줘야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에 비해서 교육 기간이 1년쯤 길고 교수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공서열로 승진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오니까 빨리 졸업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고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안고 있는 걸 개혁하기 위해서 2004년에 도입해서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경우에도 이 평가 체제가 하루속히 도입이 되어서 그것과 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통로를 함께 만드는 걸 동시에 추진해야겠다, 사실 교육부총리로 이제는 퇴임하셨지만 김부총리와 청와대에 같이 있을 때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고 또 이런 분야에서 선진국 중 봐야 될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핀란드인데 그 두 나라에 특사를 갈 때 특별히 김부총리께서 보고 오셨고 취임사에서 대학 혁신을 제일 우선 과제로 제시하셨는데 후임에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정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자유 구역 내에 외국 대학 유치 부분은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 중부대 총장)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와 같은 정책을 펴 왔습니다. 사실 이 같은 정책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능을 분산시키고 또 행정기능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수도권 문제 해결이라고 할까 민원이라고 할까 측면에서 경제 기능을 집중시켜주겠다 금융 또는 경제 기능을 오히려 집중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문제를 보면 이전과 집중 이 두 가지의 묘한, 행정기능을 이전시키면서 경제 기능을 집중시키겠다는 정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

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실은 그 전에는 경제 기능을 좀 분산시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수도권 정책이 혼선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 수도권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도권 토지 규제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저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만 90년대 중반부터 공장 총량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총량제를 10여년 동안 훑어보면 사실은 매년 할당된 공장 총량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적인 규제로 인해서 신청이 적기도 좋고 또 적당한 수준은 다음해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대기업 쪽에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수도권 지역에 많은 공장입지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전기 발전 지구가 그것을 겨냥하고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장입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기 발전지구 구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경계하시는 분들과 다른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가 그렇게 큰 기업의 장애는 되지 않지 않았나 어느 면에서 보면 국토 발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적절한 수준의 수도권 규제는 지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전기 발전 지구나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새로운 수도권 난개발 또는 국토 불균형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굳이 질문 드릴 건 없었는데 금융 연구원의 최원장님이 정부 내 협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이게 부처 내의 협의와 조정도 중요하지만 98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개혁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로 재계도 과거의 포털, 인포털하게 진행되던 다양한 형태의 대화 같은 게 단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야단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룰세팅이 변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 미래 리스크에 대한 어떤 어디선가 그걸 헛지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거에는 유착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가 경제를 안정적으

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걸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정부는 정부답게 대화와 협력 조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경협력 모델, 그리고 노동계도 마찬가지로 노동계 재계 정부간의 각자 자기 본분은 다 하되 아주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불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창영 연세대 총장) 지금 여러 가지 부총리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심리적인 환경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특히 기업의 경우 정부가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당면 과제가 아닌가 싶고 부총리께서 시장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중 어린 학생들이 피사 시험에서 2위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연세대학교 창립 120주년 맞이해서 OECD의 존스톤 총장이 오셔서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영선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여론은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사실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대학 현장에서 보면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게 있는데 평가기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다섯 개 정도의 한국의 대학들은 일부는 벌써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국 전체 대학 중 5개 정도의 대학은 100대 대학 안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정확한 선행 지표가 이과 공과 의학 분야의 논문의 편수를 계산하고 SCI지수로 보면 작년의 경우 저희가 세계에서 104등이었는데 1년에 20단계씩 뛰기 때문에 저희 학

교의 예상으로는 2010년까지는 세계 50위권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공 의학 경우 한국 대학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대학도 있고 저희와 비슷하게 하는 대학도 있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로 5년 이내에 충분히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 5개 정도 나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반적인 픽처이지만 저희 경우 화학과 같은 곳은 미국 대학 중에서 20위권에 벌써 들어가 있고 천문 우주 분야는 10위권에 진입해 있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계속 논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늦지만 저희가 글로벌 파이브 파이브 텐이라고 해서 5년 이내에 다섯 개 분야에서 세계10위권에 가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마는 한국이 5개 정도의 대학은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5년 이내에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선 교수님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 위주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지만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남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학에 대한 지원보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형평의 증진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정도의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대학이 나오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가 되어야 되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심지어 일본마저도 굉장히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어떤 개별 대학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고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몇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도 많이 하지만 지금 교육연구 여건이 굉장히 미비한데도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지금도 일반에서는 10년 전 노트를 쓴다고 하지만 그건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현재 대학은 굉장히 엄격한 평가 체제를 가지고 있고 경쟁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따뜻하게 격려하고 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코멘트 해 주신 분들도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견영 원장님의 수도권 부분은 지금 기업도시 혁신 도시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 기능도 꽤 분산하는 쪽에 균형발전 정책이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도권 부분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는 경우에도 공장 총량제와 같은 큰 규제의 범위 이내입니다. 문제는 공장 총량제와 같은 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안 되어서 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촉진시켜주느냐 하는 쪽에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장님 심리적 환경 개선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발전 단계에 비추어서 대학의 중요성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발전 단계 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증가, 노동이나 생산 요소의 증가 모델에서, 그 다음에 자본 투입 증가 투자 증가 단계, 그 다음에 혁신 단계 한국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경제 발전 단계보다 더 중요한 발전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에 의한 경제 발전 단계가 되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혁신 중심의 경제 발전 단계에 도달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몰아치고 시간이 정해져서 좀 서둘렀습니다. 부총리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만 행정부 내에서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과 기능 또 경제에 대한 애정 여기에 대한 행정부 내에서 경제 부총리로서의 오기와 고집 이런 걸 좀 더 발휘하셔서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업계의 의견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및 교열

남충현 연구원 (netch30@hri.co.kr) ☎ 02-3669-4142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4	3.4	4.0
	민간소비 (%)	8.4	4.9	7.9	-1.2	-0.3	3.2	4.0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2.1	2.3	3.4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4	0.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6.4
대 외 거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1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2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14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0)	(10.4)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2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4)	(15.6)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2.8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6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